

#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견해

송원근·강성원

## <목 차>

<요 약> .....	iii
1. 노동시장 .....	1
2. 소득재분배 .....	5
3. 시장과 정부 .....	9
4. 규제(금융규제) .....	14
5. 기업, 규제, 계획 경제 .....	17
6. 이기심과 도덕성 .....	27
7. 인플레이션 .....	29
8. 무역 및 투자 .....	33
9. 탈산업화 .....	40
10. 아프리카 .....	43
11. 교육과 경제 .....	48

## <요 약>

장하준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자원 배분 기구로서 시장보다는 정부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하준은 시장의 한계는 협소하게 설정하고 정부의 한계는 무시하는 우를 범하여, 효율적 소득분배와 혁신기반 (innovation based)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이 정부보다 우월함을 신봉하는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장하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장하준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이 개인의 기능적인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따라서 국가가 결과의 균등을 보장하는 소득재분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도 국가가 유망 기업을 무역장벽을 통해 보호하고 산업정책을 통해서 지원해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투자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장하준은 금융시장의 정보는 너무 복잡하여 인간이 소화하기 어려우므로 규제를 통해서 상품을 단순화하고 이동 속도를 늦추어야 ‘인내하는 자본’이 육성되어 기업 투자가 촉진되고 금융불안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장하준은 모든 시장에 걸쳐 정부가 폭넓게 개입하는 계획경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하준은 (1) 노동시장의 소득분배 기준은 개인의 기능적인 능력이 아니라 분업 체계와 자본재 투자의 결과인 개인의 부가가치 생산성이며, (2) 발달된 자본주의하에서 성장은 투자 안의 선별 능력이 관건인 혁신기반 성장에 의존함을 무시한다. 장하준이 주장하는 정부 개입은 노동 시장에서 취업 서비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금융시장에서 투자 위험 심사 기능의 성숙을 억제한다. 그 결과 장기실업자의 비중을 높이고, 혁신기반 성장을 지체시킨다. 결국 장하준이 지지하는 계획경제는 장하준의 의도와는 달리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이윤극대화가 생산의 무정부성과 그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의 원인이라는 마르크스 주장에 동조하여 장하준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규제가 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GM의 몰락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 경험을 들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의 사회화는 사적 소유와 이윤 동기에 따라 개인과 기업이 행하는 분업 및 자발적 협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적 소유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 분업, 전문화 및 대형화의 유인이 약화되어 경제가 퇴보하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GM은 장하준의 주장과 달리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의 높은 영향력으로 인해 형성된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와 신축성 결여가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진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아닌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유인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장하준의 계획경제에 대한 집착은 사적 소유와 이윤 동기에 근거한 기업의 계획까지 정부의 계획과 동일시하여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의 계획경제라는 현실을 오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장하준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된 것은 보호무역 덕분이며 개발도상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치산업 보호와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는 비효율적인 생산자의 시장 진입 촉진, 기술 습득에 대한 유인 감소를 가져와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없으며, 유치산업 보호론에 따른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이 실패하였고 유치산업 보호 대신 수출주도공업화 전략으로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들이 급속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보호무역에 의해 성장하였다는 주장 또한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미국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혁신 유인 촉진,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한 제도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19세기 급속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고, 영국 또한 모직공업에 대한 보호 조치가 아니라 모직공업을 대체한 면직공업에서의 혁신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이를 가능케 했던 자유로운 기업 활동 및 세계시장에의 용이한 접근 등이 원인이 되어 18세기 산업혁명이 촉발되었다.

탈산업화가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이라는 장하준의 주장은 정부 주도로 보호와 지원을 받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강조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소위 탈산업화 현상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거래증가 및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장하준은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도 자유 시장 경제 정책에서 찾고 있으나 이는 아프리카 성장 정체 원인이 전쟁 등 정치적 혼란, 질병·인구의 급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취약한 재산권, 농업 차별 및 수입대체공업화 등 경제성장에 부적합한 제도에 있었음을 간과한 주장이다. 교육이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장하준의 주장도 기계화가 탈숙련화를 촉진한다는 잘못된 이론과 경험적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 장하준의 주장과 달리 기술과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숙련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이는 그 국가의 교육수준에 의해 뒷받침된다. 장하준이 고등교육과 경제발전이 무관한 예로 제시한 스위스는 과학기술 수준이 매우

높고 작은 정부와 자유무역 원칙이라는 장하준의 처방과는 다른 정책을 통해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 1. 노동시장

- 장하준은 임금 근로자 및 기업가 소득의 국제적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과 기업가 정신을 반영하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제도와 집단적인 조직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 후진국의 근로자는 선진국 근로자보다, 후진국 자영업자는 선진국 자영업자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소득은 낮다고 주장
    - 국가간 근로자의 소득 격차는 이민에 대한 제한때문에 발생 (*Thing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 국가간 기업가의 소득 격차는 기업가 정신의 격차가 아닌 기술수준과 사회적 조직의 수준의 차이 및 집단적 조직력을 반영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다.*)
  
- 장하준은 근로자의 기능적 능력과 경제적 생산성을 혼동하여, 국가 간 임금 격차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경제적 생산성을 반영함을 무시 (*Thing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 선진국 근로자는 효율적인 분업 체계에 편입되어 있고, 보다 많은 자본재를 활용하여 생산에 참여하므로 기능적 능력은 떨어져도 시간당 산출은 높음.
    - 근대 자본주의의 생산성은 개인의 기능적 능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 한계를 타파하는 것이 핵심
    -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인 제1차 산업혁명은 효율적 분업체계를 도입하였고, 제2차 산업혁명은 자본재의 활용도를 높여서 기능적 생산성의 한계를 극복

<표 1> 제1, 2차 산업혁명

제1차 산업혁명: 18세기 말~19세기 초 영국에서 발생한 분업의 이익을 활용한 제조업 부문의 급격한 생산성 향상 현상을 의미하며 직물 및 철강 산업이 선도<sup>1)</sup>

제2차 산업혁명: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 및 독일에서 주도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제조업 부문의 급격한 생산성 향상 현상을 의미하며 중화학공업이 선도<sup>2)</sup>

- 장하준의 주장대로 이민이 활성화 되어도 효율적 분업체계에 익숙한 노동 규율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 노동자가 고소득 직종을 주로 차지
  - 효율적인 분업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할당된 공정을 반복 수행하는 노동 규율<sup>3)</sup>이 필요한데 후진국 근로자들은 습득 과정이 필요
  - 후진국 근로자의 기능적 능력은 분업의 이익이 뚜렷하지 않은 저임금 직종에서 유용하므로 저임금 직종에 주로 취업
- 선진국 고소득층과 후진국 고소득층간 소득 격차는 기업을 경영하여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의 격차를 반영 (Thing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 분업 체계를 조직하고 자본재와 노동자를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주체가 기업이며 고소득층은 이러한 기업의 운영을 담당
  - 국가 간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경영하는 기업의 실적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고소득층의 경영 능력이 반영된 격차
    - 선진국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동시에 후진국보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여 경영 능력이 있어야

1) 양동휴(2004), “영국 산업혁명과 신경제사 재론”, 『경제논집』 43(4): 559-604

2) 양동휴(1997), “규모와 범위의 경제-알프레드 찬들러의 경영사관”, 양동휴(1997), 『미국 경제사 탐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63-193

3) 실제로 산업혁명 초기에는 공장제 규율을 적용하기 쉬운 아동노동력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양동휴 (1997), “아동노동과 영국의 산업혁명”, 양동휴(1997), 『미국 경제사 탐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87-324)

## 생존 가능

□ 장하준은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의 개인적인 능력과 기업을 경영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을 혼동하여 기업가 정신의 가치를 저평가(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다.)

- 근대 자본주의의 기업가 정신은 노동과 자본을 조직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자영업의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을 의미

- 장하준이 제시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은 자영업 규모를 유지할 정도의 개인적 수완을 의미하며 근대적 기업가 정신과는 거리가 존재
- 장하준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기업가 정신이 풍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영업의 생산규모를 극복하는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증거

- 장하준이 강조하는 '집단적인 조직력'인 근대적 기업 조직은 19세기 말~20세기 초 2차 산업혁명기 거대 기업 간 경쟁을 통해 구현된 기업가 정신의 산물

- 중화학 공업 중심의 기술 혁신과 초거대 기업 운영에 적합한 경영 혁신을 통해서 근대적 대기업이 출현

□ 경영자 보수에 대한 장하준의 인식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 미국의 경영자 보수는 노동자 보수, 일본·유럽의 경영자 보수와 비교해도 너무 높다는 견해

- 장하준은 미국 CEO 대 노동자 보수의 비율이 1960~70년대 30~40대 1에서 300~400대 1로 격차가 벌어진 것은 생산성의 차이, 기업 규모의 확대에 따른 CEO 역할의 증대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 최고 경영진 결정의 중요성 증대 및 국가별 급여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보아도 미국의 CEO에 비해 비슷한 규모의 기업을 경영하는 일본이나 유럽의 CEO들이 훨씬 적은 보수를 받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

- 미국에서 CEO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수 체계가 확립된 것은 경영자 계층이 지닌 정치, 경제, 이념적 힘에 근거한다는 견해
  - CEO에 과도한 보수를 주는 비효율적인 관행이 시장의 압력에 의해 경쟁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영미의 경영자 계층이 지난 수십년 사이에 엄청나게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
  - 영미 경영자 계층의 영향력이 강해져 자신들의 결정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보수 체계가 시장의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주장

□ 경영자에 대한 보수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 생산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그 서비스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임.
  - 경영자 혹은 근로자의 보수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수요·공급 조건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차별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가별, 시기별, 그리고 직업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함.
  - 장하준의 주장은 생산적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국가, 시대, 그리고 직업을 초월해서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산성 기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산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높지 않다면 높은 보수를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같은 국가의 경영자와 근로자의 보수 격차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국가별, 시대별 경영자 보수 격차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 미국의 경영자 보수가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CEO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데에 기인함.
- CEO에 대한 제도적 진입 장벽 및 경쟁제한이 존재한다면 경영자 계층의 영향력 증대가 CEO에 대한 과도한 보수로 연결될 수 있음.

- 다른 유럽 국가나 일본과 달리 미국·영국에 CEO 관련 제도적인 진입 장벽이나 경쟁제한이 특별히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음.
- 그렇다면 미국이나 영국의 CEO 보수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높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자 계층의 영향력 증대가 CEO에 대한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체계를 결과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2. 소득재분배

□ 장하준은 성장을 촉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은 성장 및 분배에 모두 실패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이 잘 구현된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은 높지만 생활수준은 높지 않다고 주장

- 1980년대 이래 추진된 성장 촉진 정책을 성장률을 높이지 못하고 트리클다운 효과도 창출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1980년대 이후에는 1960~70년대보다 성장률은 둔화되었고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저소득층에게 성장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주장
- 미국은 국민소득이 가장 높다고 해도 소득격차가 크고 노동시간이 길어서 생활수준이 높지 않다고 주장 (*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 장하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해야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진되고 기회의 균등도 성취될 수 있으며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

- 자녀 세대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사양 산업 근로자의 대량 실직과 같은 '공정하지 못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소득 재분배가 필요 (*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 공교육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도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영양상태 및 사교육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므로 소득 재분배를 통해 격차 해소 필요

- 사양 산업에서 대량 해고되는 근로자들은 본인의 책임이 없는데도 소득이 급락하므로 이를 실업수당을 통해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
  - 실업자의 소득을 정부가 보조해 주어야 실직에 대한 반발이 약화되어 전직이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생산성이 증대
    - 실업수당이 높은 유럽보다 실업수당이 낮은 미국에서 근로자들의 보호무역 반대가 심각 (*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 1980년대 이후 보수적 거시정책 및 재분배 억제 정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저성장-고물가 현상을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 기조를 안착시켰으며, 소득 격차는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1980년대 이후 보수적 거시정책은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초반의 저성장-고물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정부 지출을 축소
    - 1975~84년 OECD 국가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연 11.1%였으며 성장률은 2.4%에 불과한 반면 성장률의 표준편차가 1.46%에 달하여 경기가 불안<sup>4)</sup>
    - 1980~85년 OECD 국가<sup>5)</sup>의 평균 재정수지는 GDP의 -3.70%였지만 1986~2005년에는 -2.74%로 0.96%p 개선
  - 1975~84년에 비해 1985~2005년간은 성장률은 상승하고 경기변동은 축소되었으며 물가는 급락하여 지속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
    - 평균성장률은 2.7%로 소폭 상승했고 성장률의 표준편차는 0.88%로 감소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연 3.56%로 안정
  - 장하준은 '소득격차의 심화'가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정체'를 필연적

4) 동부 유럽 국가들과 터키,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한국을 제외한 22개국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5) 1980년부터 자료가 제공되는 9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의 평균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으로 야기한다고 간주하여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 효과를 무시

- 경제성장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실질소득도 증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개선
- 국가의 평균소득이 1% 상승하면 1일 소비가 1\$ 이하인 인구의 비중이 2.5%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sup>6)</sup>

□ 미국의 이민 노동자의 저임금 및 평균적인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들의 선택의 결과이며, 미국 노동시장은 이러한 선택을 보장하여 높은 수준의 후생을 제공 (*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 미국의 소득 격차는 이민 노동자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이민 노동자들이 자국을 떠난 선택의 결과
  - 미국의 이민 노동자들은 자국에서 취득할 수 없는 높은 소득을 미국에서 취득할 수 있으므로 자국에서 보다 후생 수준이 향상

- 장시간 근로는 미국 근로자들이 여가 보다는 근로를 선택한 결과로 후생 수준이 가장 높은 상태의 근로 시간을 반영
  - 노동시간 및 임금이 규제되어 장시간 근로를 해도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보다는 근로자들에게 후생 수준을 향상할 기회를 더 많이 허용하는 시장

※ 미국은 최저 휴가일수 규제가 없고 야간 및 휴일 작업 규제도 없어 근로시간을 늘리기에는 유리<sup>7)</sup>

□ 소득균등화 정책은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며, 교육기회 균등 및 사양 산업 근로자의 소득 보전은 보다 부작용이 작은 저소득층 아동 복지 및 재취업 교육 시장을 통해서 달성 가능 (*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 소득균등화 정책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므로

6) Ravallion, Martin. (2001). "Growth, Inequality and Poverty: Looking Beyond Average". *World Development*. 29(11).1803-1815

7) World Bank. Doing Business Index (<http://www.doingbusiness.org/data/>)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장기실업을 양산

-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소득 지원(AFDC-UP)이 20% 증가하면 남성 고용률은 0.2%p, 여성고용률은 0.5%p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sup>8)</sup>
- 2005년 현재 OECD 선진국<sup>9)</sup> 중 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실업자 지원 지출은 비유럽 국가의 2.9배이며, 실업자 중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도 1.8배

※ GDP 대비 실업자 지원: OECD 유럽 1.3%. vs OECD 비유럽 0.4%

※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중: OECD 유럽 34.0%. vs OECD 비유럽 19.0%

- 직종 선택에 장애가 없을 정도의 교육기회 균등은 유자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
  - 사교육까지 포괄하는 교육은 장기 투자가 필요하므로 소득 보다는 자산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소득균등화로는 동일 수준의 교육기회 부여가 불가능
  - 선천적 능력 범위 내에서 선호 직종에 대해 경쟁할 수준의 기회 균등은 공교육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에 교육비용을 지원하면 가능
- 사양 산업 근로자가 많아지면 재취업 교육 서비스 시장이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재취업을 통한 소득 보전을 촉진
  - 사양 산업 해직 근로자들은 노동 중개 및 직업 교육 등 재취업 관련 서비스 시장의 수요를 형성하여 시장의 성장을 촉진
  - 정부가 해직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면 직업 교육을 받을 유인이 약화되어 재취업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저해

□ 장하준은 실업자의 소득이 보호되면 이직 유인은 강화되나 재취업 유인이 약화되고 재취업 서비스 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전직을 통한 노동력의 배분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간과 (*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8) Hoynes, Hillary Williamson (1993). "Welfare Transfers in Two-Parent Families: Labor Supply and Welfare Participation under AFDC-UP", (Working paper no. 400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9) OECD 국가 중 동유럽 국가들과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 칠레, 한국을 제외한 22개국 (OECD SOCX data <<http://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

- 장하준은 정부가 실업 수당을 지원하면 이직 시 생활수준이 유지되어 이직 유인이 강화되므로 노동력의 재배치가 촉진된다고 주장
- 정부가 실업 수당을 지원하면 근로자가 직업 탐색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직업 탐색을 단축할 유인이 약화
  - 실직 기간이 연장되어도 비용 부담이 적으므로 직업을 탐색하려는 노력은 약화되고 실직 상태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강화
- 실직 기간 연장 부담이 적어 양질의 재취업 교육 및 고용 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므로 재취업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지체
  - 직업 탐색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 양질의 재취업 교육 및 노동 중개 서비스 수요가 강화되어 재취업 서비스의 질이 향상

### 3. 시장과 정부

- 장하준은 시장보다 정부가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구이며,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산업정책이 국민경제에 유리하다고 주장
  - 모든 시장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가 존재하므로 자유시장이란 허구라고 주장 (*Thing 1. 자유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 상품의 종류(아동노동 금지), 상품의 가격(임금 및 이자율), 거래 참가(면허제도) 등 정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현상을 지적
    - 규제에 대한 찬반은 시장의 운용에 대한 믿음 보다는 규제 도입 및 폐지 대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기인한다고 주장
  - 정부는 기업보다 정보의 수집·소화 능력이 뛰어나고, 국민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므로 정부가 유망주를 선정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중국과 같이 동아시아 경제 기적을 이룬 국가들은 모두 국가가 주도하여 기업을 육성
    - 정부는 여러 기업의 협조를 받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기업보다 이로우며, 기업과는 달리 국민경제에 이롭게 사용 가능

- 자유시장 경제학은 산업정책을 부정하여 경제 운영을 파탄시켰으므로 자유주의 경제학자는 경제 정책 운용에 필요 없다고 주장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1950년대 이래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성장은 법학, 공학을 전공한 관료들이 주도
  - 자유주의 경제학은 지난 30년간 저성장 기조를 안착시키고 국제적 금융위기 초래
- 정보통신 혁명으로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현상은 19세기 말 기술진보보다는 여파가 작다고 평가 (Thing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 전보의 발명에 따른 통신기간의 단축, 가전기기의 발달에 따른 가사노동 부담의 완화에 비하면 정보통신혁명의 효과가 미약
  - 정보통신 혁명으로 국경 간 교역이 일상화된다고 간주하고 교역장벽을 낮추는 정책은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을 통한 개도국 산업화 가능성을 제약

□ 장하준은 교역의 이익을 확대하는 시장 친화적 정부 개입과 이를 축소하는 반 시장적 정부 개입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정부 개입을 동일시 (Thing 1. 자유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 교역의 이익(Gains of Trade) 실현을 촉진하여 시장 참여를 유도하되 가격 및 수량은 시장에 맡기는 정부의 개입은 시장 친화적(market friendly) 개입
  - 개인 소유권을 보호하고 사기 등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한하여 민간이 교역에 참여할 유인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sup>10)</sup>
  -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면허제도 등 인증(Certification)을 통해서 거래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시장 교역의 범위를 확대

---

10) 구체적으로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정부에 의해 제약되지 않으면 일회적인 거래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속여서 일회적인 유익을 추구할 유인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장기적 상호작용이 있어서 신용의 축적이 요구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소비자가 재화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거래가 위축된다. 그러나 정부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제약할 경우 거래가 일회적인 거래의 경우까지 확대될 수 있다(Barzel, Yoram(2001), A theory of State: Economic Rights, Legal Rights and the Scope of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는 개입은 시장에 참여할 유인을 제한·왜곡하는 반시장적(market-unfriendly) 개입
  -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이 정부 개입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교역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지대를 추구 (rent-seeking)
  - 교역의 이익이 정부(공기업) 혹은 정부가 선정한 특정 집단에 귀속 되므로(산업정책) 장기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약화
  
- 시장 친화적 정부 개입은 성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반시장적 정부 개입은 시장의 성장을 위축시켜 성장 지속에 한계
  - 소유권이 미분화<sup>11)</sup>되고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프랑스보다는 명예혁명<sup>12)</sup>으로 소유권이 확립되고 금본위제로 통화가치를 안정<sup>13)</sup>시킨 영국이 산업혁명 선도
  -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대공황기에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사유재산권의 범위가 협소하여 경제 활력이 저하되었고 성장 지속에는 실패

□ 장하준은 투자의 성패를 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시장기구의 장점을 무시하고, 이러한 시장의 능력 신장을 억제하는 정부주도 산업화의 성과를 과신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 기업의 잘못된 투자는 시장 경쟁에 의해서 종결되지만, 정부가 잘못 지정한 유망주는 퇴출이 지연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
  - 기업은 투자안을 잘못 선택하면 수익이 악화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므로 비효율적 투자로부터 효율적인 투자로 재원을 신속하게 이동
  - 정부가 선정한 유망주는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시장 경쟁의 견제를

11) 대혁명 이전 프랑스는 토지 소유권이 미분화되어 경작 규모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어려웠다(Hoffman, Philip T.(1988) "Institutions and Agriculture in Old Regime France", *Politics and Society*16(2-3);241-264).

12) North, Douglass C. & Barry R. Weingast(1989), "Constitutions and Commitment: The Evolution of Institutional Governing Public Choi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9(4):803-832

13) 18세기말~19세기초 영국과 프랑스의 통화정책 기조의 차이에 대해서는 Bordo, Michael D & Eugene N. White, "A Tale of Two currencies: British and French Finance During Napoleonic War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1(2): 303-316을 참조



받지 않아서 잘못된 투자를 해도 이를 철회하려는 유인이 약함.

- 산업정책은 투자 안을 선별하는 금융시장의 능력을 위축시켜 위험한 투자에 성장을 의존하는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효과가 제한
  - 발달된 자본주의에서는 안전한 투자기반(investment-based) 성장보다는 실패 위험이 높은 혁신기반(innovation-based) 성장에 의존<sup>14)</sup>
  - 위험한 투자를 선별·수행하며 실패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자본 투입을 신속하게 철회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능력이 필수적<sup>15)</sup>
  - 정부가 재원 배분을 독점하면서 기술 심사 및 신용 평가를 통해 투자 안을 선별하는 위험자본(risk capital)의 기능이 미성숙
  
- 산업정책은 선진국 추격 성장(Catch-up)전략을 구사한 개도국의 투자 기반 성장 단계에서는 유효하나 혁신기반 성장에는 한계
  - 추격 성장은 2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정부가 거대 자본을 동원하여 재생하는 투자 기반 성장
  - 원래 2차 산업혁명은 미국 및 독일의 대기업 및 JP Morgan과 같은 대형 투자 은행 등 민간 기업이 주도<sup>16)</sup>

□ 장하준은 시장친화적 경제 운용에 필요한 자유주의 경제학을 무시하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안정성장을 달성한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폄하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자유주의 경제학은 안정 성장에 필수적인 시장 친화적 개입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정부 개입의 한계를 설정
  - 자유주의 경제학은 정부의 역할을 시장의 원활한 운영 촉진으로 제한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을 억제
  - 안정적 통화 가치를 유지하고, 소유권을 보장하며, 기회주의적 행위

14) Acemoglu, Daron, Phillippe Aghion and Fabrizio Zilibotti(2002), "Distance to Frontier, Selection and Economic Growth", (Working Paper no. 906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5) Frankel, Allen D. and Gale, Douglas(2000), Comparing Financial System. Cambridge, MA: The MIT Press.

16) 양동휴(1997), "규모와 범위의 경제-알프레드 찬들러의 경영사관", 양동휴(1997) 『미국 경제사 탐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63-193.

와 왜곡된 정보의 유통을 억제하여 거래의 불확실성을 축소

- 작은 규모의 균형 재정을 유지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자원 배분을 억제하고 시장의 자원 배분을 촉진

– 장하준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고물가-저성장을 극복하고 통화가치 안정 및 안정성장을 달성한 성과 무시

-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은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변동이 축소되면서 성장률은 증가하는 '안정화 시대'(Great Moderation)를<sup>17)</sup> 경험
- 개도국 금융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원칙이 훼손되고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어 무역 및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이 방만하며 국가부채가 누적된 국가에서 주로 발생<sup>18)</sup>

– 시장 친화적 정부 개입을 유지하여 안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의 한계를 이해하는 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의 역할이 중요

-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의 보수적 통화정책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운영을 담당하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주도

□ 창조적 혁신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산업정책의 효과가 저하되는 환경을 창출한 정보통신 혁명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정부의 역할을 과대평가 (Thing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 정보통신 혁명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TFP)은 1970년대~1990년대 초반의 저성장을 극복하고 19세기 말~1960년대 기술진보와 유사한 고속 성장을 달성

- 미국의 연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47(1870~1913)→1.08(1913-1972)→0.02(1972-1995)→1.25(1995-1999)<sup>19)</sup>

– 정보통신혁명은 전보를 비롯한 19세기 말~20세기 초 기술진보와 유

17) Stock, James H. & Mark. W. Watson (2002). "Has the Business Cycle Changed and Why?", (Working Paper no. 912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8) 1970년~2002년 발생한 외환위기 중 무역 및 재정 적자, 방만한 통화정책, 국가부채 누적 등 거시경제적 불안요인이 없이 일어난 외환위기는 개도국 위기의 2%, 선진국 위기의 17%에 불과(Kaminsky, Craciela L.(2003), "Varieties of Currency crisis", (Working Paper no. 1019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 Gordon, Robert J.(2000), "Does the New Economy Measure Up to the Great Invention of the Pas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4. no. 14. (Fall, 2000). pp.49-74

사하게 전 산업에 걸쳐 생산성 향상 주도

- 19세기 말~20세기 초는 전기, 내연기관, 유기화학, 통신 및 오락의 4가지 중요한 기술진보가 동시에 진행되어 현대적 생활수준이 달성된 'One Big Wave'의 시기<sup>20)</sup>
  - 정보통신 혁명은 1990년대 전반 내구재 제조업, 1990년대 후반에는 제조업 전반 및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진을 촉진<sup>21)</sup>
- 정보통신 혁명으로 혁신 기반 신규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위험 자본의 역할은 강화되고 정부 주도 산업정책의 유효성은 약화
- 신규 기업은 정보통신 및 생명과학 등 기술수준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위험 자본은 그 재원을 제공<sup>22)</sup>
  - 불확실성이 큰<sup>23)</sup> 혁신 기반 기업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실패한 투자를 효율적으로 종결할 수 없는 정부 개입의 한계가 노정

#### 4. 규제(금융규제)

□ 장하준은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한 오류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 혁신 및 자본 이동을 규제할 것을 주장

- 정보 소화(information processing)능력의 한계를 넘는 분석이 요구되는 소비는 잘못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제를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 (*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

20) Gordon, Robert J.(2000), "Interpreting the 'One Big Wave' in U.S. Long-term Productivity Growth." in Bart van Ark, Simon Kuipers, and Gerard Kuper, eds, Productivity, Technology and Economic Growth. Kluwer Publisher (2000). pp. 16-65

21) Baily, Martin Neil. (2002). "Distinguished Lecture on Economics in Government: The New Economy: Post Mortem or Second Wind?".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16(2); 3-22

22) 미국의 경우 벤처 캐피탈이 지원한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는 전체 기업공개 20%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50%를 넘어섬(Gompers, Paul A. and Josh Lerner (2001). The Money of Inven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p.66)

23) 일반적으로 미국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사업체의 1/3만이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에 성공(Lehner, Josh (2009).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52)

- 경제 주체의 합리성은 '제한적 합리성'이기 때문에 정보 소화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는 결정에서는 오류가 발생
  -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금융시장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금융상품은 규제를 통해 단순화할 필요가 존재
- 금융혁신으로 인해 자본이 지나치게 빠르게 이동하여 기업이 장기투자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므로 자본의 이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 (Thing 22. 금융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 1980년대 이후 금융산업 규제완화로 자본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장기자본 공급이 부족하여 금융산업은 성장했지만 경제성장은 지체
  - 국경 간 자본 이동을 억제하고 투기성 거래를 촉진하는 적대적 M&A, 공매도와 같은 거래를 제한하여 지나치게 빠른 자본이동을 규제할 필요
- 장하준은 복잡한 정보를 가공하는 전문 서비스업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2008년 금융위기 원인을 정보의 왜곡·손실이 아닌 정보의 과잉으로 오진 (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 복잡한 정보 해석이 필요한 상품의 시장에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정보를 해석하는 전문 서비스업이 발달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보조
    - 의료, 법률, 부동산, 와인 등 복잡한 선택에 대해서 소비자를 대항하여 정보를 소화하는 전문 서비스업이 성장한 것이 선진국의 특징
  - 선진국은 상품을 단순화하기 보다는 전문 서비스업 인증 및 사후적 점검(monitoring)을 통해서 상품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 주력
    - 상품혁신은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켜 후생수준을 제고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억제하기 보다는 시장의 정보 처리 기능을 제고
  - 2008년 금융위기는 이자율 및 신용평가회사의 금융상품 위험 관련 정보 전달 기능이 왜곡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정보가 유실되어 발생
    - 2000년 이후 낮은 이자율이 지속되어 이자율의 위험 전달 기능이 왜곡되면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주택 대부를 기반으로 유가증

권이 대량 발행<sup>24)</sup>

- 유가증권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신용평가 기관이 유가증권 발행 업무를 병행하면서 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sup>25)</sup>
  - 유가증권의 장외거래 비중이 높아서 유가증권을 발행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정보가 유실<sup>26)</sup>
  - 주택 대부 시장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주택 대부 기반 유가증권의 채무 이행 책임을 지는 발행기관들의 건전성 정보가 유실되자 유가증권 보유자들의 투매 현상이 발생하여 금융위기를 초래
-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은 정보의 과잉이 아닌 정보의 부족이며, 정보의 부족은 정부가 시장 친화적으로 경제를 운영하지 못하여 발생
-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을 오래 지속하여 이자율을 이용한 시장의 위험 거래 기능을 마비시키고 부실대출을 초래
  - 신용평가 기관이 정보를 왜곡할 유인이 존재함에도 신용평가 기관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정부가 정보의 왜곡을 방치<sup>27)</sup>

□ 장하준은 자본 이동이 활발한 시장에서 위험 자본(risk capital)이 장기 자본 지원 역할을 수행함을 무시하고 '인내하는 자본'의 역할을 과대평가 (Thing 22. 금융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인 필요가 있다.)

-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감시와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위험 자본이 중요하며 이들은 효율적 자본시장에서 성장 가능
- 미국의 19세기말~20세기 초 산업화는 JP Morgan과 같은 투자은행이, 정보통신혁명을 이끈 Cisco, Fedex 등 현대적 대기업은 벤처 캐피탈이 자본 조달
  - 벤처 캐피탈은 단계별 투자전략(staged financing)을 통해 감시와

---

24) The Economist (2008.10.11). "A monetary malaise" in "When fortune frowned: A special report on the world economy"

25) Calomiris, Charles W. (2008). "The Subprime Turmoil: What's Old, What's New and What's Next".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http://www.aei.org/paper/28720>>Calomiris (2008)

26) Gorton, Gary (2009.) "Information, Liquidity, and the (Ongoing) Panic of 2007,"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9(2): 567-72

27) Calomiris, Charles W. (2008). "The Subprime Turmoil: What's Old, What's New and What's Next".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http://www.aei.org/paper/28720>>

- 지원을 병행하면서 위험을 관리
- 벤처 캐피털은 기업 공개를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므로 가치 있는 기업에게 투자가 신속하게 집중되는 효율적 자본시장에서 보다 활발하게 성장
- '인내하는 자본'은 기업의 진입-퇴출 경쟁을 제약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과도하게 지원하여 생산성을 저하
  - 특정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관계가 있는 기존 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신규 진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sup>28)</sup>
  - 특정 기업 대출이 누적되므로 부실이 발생해도 자본을 추가 투입하여 파산을 지연시키려는 유인이 커서 기업의 퇴출을 억제
  - 결국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비효율적인 기업에게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제약<sup>29)</sup>

## 5. 기업, 규제, 계획 경제

### □ 마르크스와 기업

- 장하준은 유한책임회사의 등장과 함께 그 중요성을 가장 먼저 파악한 사람 중 하나로 마르크스를 지목
  - 마르크스는 유한책임회사의 등장을 사회주의 이행의 전환점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장하준의 해석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생산의 사회화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라는 모순으로 인해 생산수단이 사회화되는 사회주의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
- 마르크스와 기업의 경영목적은 어떤 관계인가?

28) '인내하는 자본'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과 일본의 대형은행이다. 이들 금융기관은 대기업과 장기적인 거래관계 형성을 통해 내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서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효율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래관계가 없는 신규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투자에 소극적이며, 이는 신규 기업에게는 암묵적인 진입 장벽을 형성한다.

29) Caballero, R., Hoshi, T., & Kashyap, A. (2008).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1943-1977.

- 장하준은 사회주의 이행이라는 예언은 실현되지 못했으나 유한책임이라는 제도가 자본주의 생산력을 높였다는 마르크스의 예언은 적중했음을 지적
  - 장하준의 마르크스 거론은 기업지배구조가 사적소유에 기반을 두고 주주 가치 극대화를 구현하는 형태가 아닌 이해당사자의 강력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보다 사회화된 형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사회적 분업의 심화와 더불어 생산의 집중 및 대형화가 이루어져 생산의 사회화가 진전됨을 강조
  - 그러나 생산의 사회화가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소유관계의 사적 형태로 인한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주기적인 불황의 도래, 대규모 산업예비군의 존재 등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도 심화되어 과잉생산과 공황의 순환이라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
  - 이런 모순의 해결은 종국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혁명적 이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결론
  -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이윤, 즉 소유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업의 경영 목적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생산의 무정부성과 그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의 궁극적인 원인
- 장하준은 마르크스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의 필연성이라는 마르크스 주장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지적
  - 유한 책임이 투자 리스크를 완화시켜 대규모 자본 축적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은 마르크스 예언과 의견을 같이 함.
  - 기업 소유주의 이익 극대화, 즉 주주 가치 극대화가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는 데에 마르크스와 의견을 같이 함.
  -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의 혁명적 이행 없이도 이해 당사자의 경영에 대한 통제를 제도화하여 주주 가치 극대화 추구에 따른 경제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음.
  - 그러나 기업의 경영 목적 및 지배구조를 기업 소유주의 사적 소유에서 보다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음.

□ 주주 가치 극대화과 이해 당사자의 기업 통제 (Thing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 장하준은 주주 가치 극대화가 경제 전체는 물론 해당 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로 주주와 전문경영인 간의 비신성 동맹이 성립으로 해소되었으나 이러한 동맹은 기업의 기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착취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장하준의 주장
  - 이러한 비신성 동맹은 고용 불안정, 납품 업체에 대한 지속적 단가 인하 압박, 정부에 대한 법인세 인하 및 보조금 확대 압력 등을 야기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
  - 주주들은 기업에서 가장 쉽게 손을 뗄 수 있어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관심이 없는 반면 노동자나 납품 업체와 같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해당 기업에 특화된 기술 및 투자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워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민감하므로 주주 가치 극대화는 해당 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장하준의 주장
- 주주 가치 극대화가 이해 당사자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지배구조보다 기업과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근거로 장하준이 제시한 증거
  - GM: 장하준은 2009년 GM의 파산이 경영인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주주 가치 극대화로 다운사이징 추진, 투자 회피, 이윤 남용 등 단기 전략 위주의 경영에 기인한다고 주장
  - 미국의 투자 및 1인당 국민소득 변화: 국민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20.5%에서 1990~2009년 18.7%로 감소, 1인당 국민소득은 1960~70년대 연간 2.6% 증가에서 1990~2009년 연간 1.6%로 감소

□ 이해 당사자가 통제하는 지배구조 혹은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는 해당 기업과 경제 전체 발전을 정체시킴.

- 생산의 사회화와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경영방식도 사회화되어야 하는가?
  -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생산의 사회화라고 일컫는 현상은 재산권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에서 개인들이 이윤-손실 기준에 따



- 라 행하는 분업 및 자발적 협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 사유재산제도가 훼손되어 사회적 소유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 시장에서의 거래와 이를 위한 생산에 의해 촉발되는 분업 및 특화의 심화, 그리고 이에 따른 생산의 전문화 및 대형화의 유인은 약화되어 경제의 퇴보 및 사회후생의 감소로 이어지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
  - 따라서 생산의 사회화와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방식이 사회화되어야 할 근거는 전혀 없음.
-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한 지배구조보다 이해 당사자의 통제가 가능한 지배구조가 기업의 장기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가?
- 유한책임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대리인(agency) 문제
  - 대리인 문제 해소를 위해 설계되는 유인 체계는 전문경영인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및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투자·생산·마케팅·인사 등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이 평가하고 통제하는 시스템<sup>30)</sup>
  - 이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주주 가치 극대화 원칙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기업의 여타 이해 당사자들에게 부(負)의 외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sup>31)</sup>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경영 참여 및 통제가 가능한 지배구조가 제시되며 장하준의 지적과 같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 등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해 당사자 지배구조는 기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이해 당사자 지배구조도 모든 이해 당사자와 경영진 간의 대리인 문제가 존재하고 이해 당사자의 이익 혹은 후생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에 유인 체계를 제공해야 함.

30) 장하준은 이 시스템을 나머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착취를 통해 주주와 전문경영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비신성동맹이라고 칭함.

31) 이런 문제점은 이해당사자 지배구조(stakeholder society)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며 주주 가치를 위한 지배구조에서 기업 실적이나 가치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주주 이외의 여타 이해당사자들에게도 더 유리함을 Sundaram, A.K. and A.C. Inkpen(2004), "Corporate Governance Revisited," Organization Science, 15(3), p.350~363에서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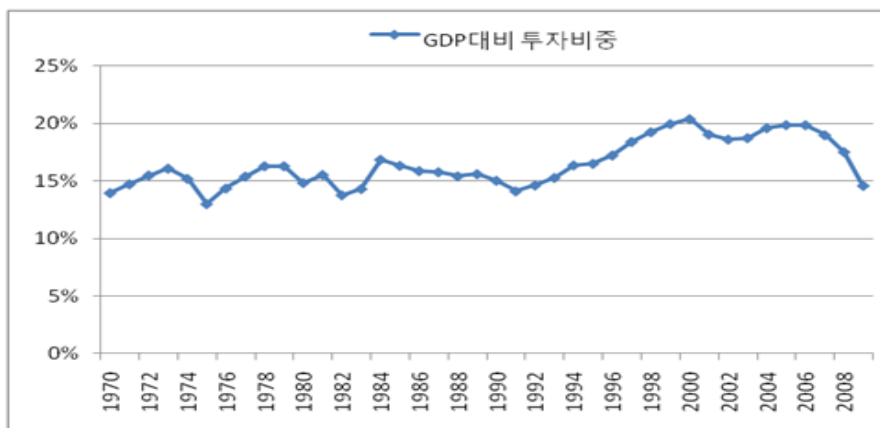
- 그러나 이해 당사자 모두의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에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없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인 체계를 경영진에 제공할 수 없음.
  - 경영진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므로 경영진의 어떤 행동도 특정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합리화할 수 있고, 이는 비효율적인 기업 경영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예를 들면 일자리 보호, 납품기업 보호의 명목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이해 당사자 지배구조 하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반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신속한 투자, 적절한 위험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효율성, 특히 장기적인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sup>32)</sup>.
- 주주 가치 극대화가 기업과 국민경제에 더 부정적이라는 근거로 장하준이 제시한 예들은 적절한가?
- GM의 몰락은 경영진이 주주 가치 극대화가 아닌 이해 당사자, 특히 노조의 요구에 굴복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 1990년대 빈번하게 발생한 파업의 수습을 위해 GM 경영진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요구를 계속 수용하여 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자와 그 가족, 퇴직자 및 미망인에게 까지 의료비 및 연금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위 유증비용(legacy costs)의 급증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격경쟁력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렸음.
  - 1990년대 노조와의 합의는 기존 사업장 이전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업의 신축성을 크게 감소시켰고, 이러한 사업장의 유지는 구형 모델의 생산 지속과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 신규 모델 개발을 위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GM의 경쟁력 약화, 즉 시장점유율의 감소 및 수익성 악화에 크게 기여함.
  - 따라서 GM의 예는 주주 가치 극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가 아닌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경영진이 부응하여 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몰락에 이르게 한 이해 당사자 기업 경

32) Tirole, J.(2001), "Corporate Governance," *Econometrica*, 69(1), p.1~35. Tirole(2001)에 따르면 이해당사자 지배구조는 pledgeable income의 부재, 의사결정의 교착상태, 경영진의 목표 부재 등의 이유로 주주 가치를 위한 지배구조보다 비효율적임을 지적

영 통제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투자의 비중은 장하준의 주장과는 달리 다음 <그림 1>에서 보듯이 1990년대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1960~70년대 연평균 1인당 GDP 증가율과 1990년 이후의 그것을 비교하여 주주 가치 극대화를 지향하는 기업지배구조가 국민 경제에 부정적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자의적인 논리

<그림 1> 미국의 GDP 대비 투자비중의 변화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기업을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장하준의 인식 (*Thing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 좋은 것은 아니다.*)
  - GM의 사례는 기업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유익한 교훈이라는 견해
    - 장하준은 GM이 경쟁력 제고보다는 정부에 대한 로비, 금융 진출, 경쟁 업체 합병 인수 등 단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 납품업체 등과 국가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자신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
    - 즉, 기업에 대한 과소 규제가 부동 주주 및 경영진을 제외한 기업의 이해 당사자와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
  - 많은 경우 규제가 실제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견해
    - 장하준은 1990년대 이전의 한국, 일본, 타이완, 그리고 최근의 중국

을 엄격한 규제 하에 빠르게 성장한 예로 들고 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가 퇴보하였다고 주장

- 장하준은 기업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유가 많은 경우 규제가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아동노동에 대한 규제, 은행에 대한 규제, 기업에 대한 노동자 교육의 강제, 기술도입에 대한 규제 등이 장기적으로 기업, 산업, 국가에 모두 도움이 되는 규제라고 주장

□ 기업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기업의 생산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면 규제 회피와 경쟁 제한을 위한 지대추구행위 유인을 증가시킴.

- GM의 사례는 이해당사자, 특히 노조의 막강한 영향력에 따른 고비용 구조 심화와 경직적인 경영의 결과 경쟁력을 상실한 대표적인 사례
  - GM은 장하준의 주장처럼 기업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노동자, 하청 기업을 쥐어짠 것이 아니라 주주를 제외한 이해 당사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와 신축성 결여로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
  - GM의 경우 1990년대 빈번한 파업의 수습을 위해 임금 인상 및 연금 확충 등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요구를 계속 수용한 결과 기존 근로자들은 물론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 및 의료비 지원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음.
  - 특히 퇴직자 및 미망인에 대한 연금 및 의료비 혜택에 따른 소위 유증비용(legacy costs)이 급격하게 증대되어 자동차 한 대당 \$2,000의 유증비용이 소요되는 고비용 구조가 심화되었고 이것이 GM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됨.
  - 1990년 노사합의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해고가 어렵도록 한 점과 공장 이전 혹은 폐쇄 등의 경영 사안에 노조가 참여하도록 한 점도 경영의 신축성을 감소시켜 경쟁력 상실에 기여함.
  - 노사합의에 따른 비효율적인 공장의 유지로 인해 기존의 다양한 차종이 디자인과 품질 개선 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유럽, 일본, 한국의 경쟁업체에 비해 소비자 선호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경쟁력 상실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
  - 연금 및 의료비 혜택에 대한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

라 노조의 경영 참여에까지 합의한 GM의 경영방식은 한때 이해 당사자의 경영 통제가 반영된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로 칭송받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GM의 몰락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GM의 몰락을 근거로 기업에 대한 과소규제가 이해 당사자와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음.
-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 및 계획보다 자유로운 기업의 생산적 활동을 유인하는 제도적 환경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였음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
-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최근의 중국이 빠르게 성장한 원인은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유인, 즉 수출 등을 통한 기업의 이윤 추구에 대한 유인이 제도적으로 부여되었기 때문
  - 기업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크고 빈번함을 의미하며, 이 경우 기업은 규제회피노력 혹은 규제에 의한 진입장벽 형성 등 경쟁제한을 통한 지대추구를 위한 활동의 유인이 높아져 생산적 활동에의 유인이 감소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제약하게 됨.
  -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최대한 배제되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된 환경에서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한 대표적인 국가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을 들 수 있음.
  - 중국의 경우 기존 사회주의 체제에서 정부계획에 의한 생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개혁·개방을 실시하였고, 개혁·개방, 즉, 진입과 경쟁의 촉진,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지향,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 등을 통해 급속하게 성장함.
  - 아프리카의 예는 장하준의 주장과 달리 규제가 적고 기업환경이 좋은 모리셔스, 보츠와나 등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장하준이 주장한 장기적으로 기업, 산업,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규제는 논리적·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주장. 예를 들면 장하준이 주장한 아동노동에 대한 규제의 저개발국에의 적용은 어린이들을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일자리 상실로 매춘, 범죄 등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결과를 낳음.

-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의 열악한 공장 환경은 장하준의 논리대로라면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쳐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나 마오(Mao) 시절 수천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든 ‘대약진운동’ 등 계획경제 시책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대안이었으며 번영으로 가는 길의 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시장과 계획에 대한 장하준의 인식 (Thing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 공산주의 실패의 원인이 경제의 복잡성에 있다는 견해
  - 장하준은 공산주의의 중앙 계획 시스템이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기반으로 사전 조정을 통해 시장경제 시스템보다 경제를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견고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중앙 계획 시스템이 실패한 것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산할 제품의 수가 많아지고 종류가 다양해져 중앙 계획이 갈수록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주장
-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계획을 세우며 문제는 각각의 다른 경제 부문에 적절한 계획의 형태와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는 견해
  -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도 경제를 계획하여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국영 기업의 운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등에서 보듯이 정부에 의한 경제 계획은 광범위하며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
  - 장하준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각 기업의 내부 계획과 정부의 다양한 계획들을 합치면 고도의 계획 경제이며 따라서 문제는 적절한 계획의 형태와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주장

□ 시장경제에서의 사회적 협력과 기업의 계획은 사적 소유 및 이윤 동기에 근거

- 공산주의의 실패는 계획의 실패가 아닌 사적 소유의 철폐에 따른 이윤 동기의 제거에 근본적 원인이 있음.
  - 생산의 사회화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간의 모순으로 나타나는 생산의 무정부성을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중앙 계획 시스템으로

- 조절할 수 있다는 논리는 소위 생산의 사회화의 원인을 간과한 논리
- 소위 생산의 사회화라고 일컫는 현상은 사적 소유가 보장되는 시장 경제에서 개인들이 이윤 동기에 따라 행하는 분업 및 자발적 협조에 의해 거래, 생산, 전문화의 확대가 나타나는 현상
  - 따라서 소유 관계의 변화로 사적 소유가 철폐되면 이윤 동기가 제거되고 이에 근거한 시장에서의 거래, 생산 및 분업, 그리고 전문화의 확대가 나타나지 않게 됨.
  - 소유 관계의 변화는 생산의 사회화, 즉 분업과 전문화에 의한 사회적 협조의 기반인 이윤 동기라는 유인 체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한 계획 경제는 정부의 명령과 지시를 통해서만 작동될 수 있어 혁신과 전문화의 유인이 없고, 따라서 개인들의 자발적 협조에 의한 생산과 분업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중앙 계획경제의 실패는 계획의 비효율성보다 유인 체계의 문제점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 정부의 계획은 시장 친화적인 계획일 경우에만 경제에 긍정적이고, 기업의 계획은 이윤 동기에 근거
- 정부의 계획이 성공하는 경우는 국민의 정치·경제적 자유의 보호, 즉 치안·국방과 재산권의 안정적 보장 등 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도움이 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 또한 정부의 계획이 개인, 기업이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에 특화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유인 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는 경우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장하준이 말하는 소위 ‘유도계획’이 성공한 경우는 시장 친화적 유인 체계 구축에 기여한 경우이고 ‘수입대체공업화’와 같이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에 특화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유인 체계와는 상반되는 정부 계획은 인도의 경우와 같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음<sup>33)</sup>.
  - 기업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한 장기적 이윤 극대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혁신 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은 생산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작성되는 사업계

33) 인도의 경우에 대해서는 Panagariya, A.(2004). *India's Trade Reform: Progress, Impact and Future Strategy*, mimeo 참조. 인도가 전후 다른 개도국에 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 및 보호주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Panagariya(2004)의 주장

획은 이윤 동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계획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따라서 기업의 계획과 정부의 계획을 단순히 계획이라는 공통점만을 고려하여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의 계획 경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 계획과 정부 계획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여 현실을 오도하는 주장

## 6. 이기심과 도덕성

□ 이기심과 도덕성에 대한 장하준의 인식 (Thing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 이기심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이라는 인식
  - 장하준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쫓는다면 속임수가 만연하고 되는 일이 없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모든 인간이 자기 이익만을 취한다는 전제의 예로 '봉지 밑에 썩은 사과를 끼워 넣는 양심 없는 과일가게 주인' 등 소비자를 속이는 상인들을 들고 있는 데에서 장하준의 이기심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음.
- 인간의 행동 동기는 이기심 외에도 정직성, 이타심, 신뢰, 충성심 등 도덕적인 본성에도 상당 부분 근거한다는 인식
  - 성공적인 기업들은 의심과 이기심보다는 신뢰와 충성심을 바탕으로 돌아감.
  -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과 제재 장치가 있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게 행동함.
  - 사람들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
  -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쫓는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를 설계하면 효율성이 도리어 떨어진다는 것이 장하준의 주장
  - 즉, 사람들이 도덕적 주체로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어 도덕적 행동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사람들을 감시·판단·



- 제재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주장
- 최악의 행동을 예상하면 결국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

□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 시장경제에서만 진정한 도덕성이 담보됨.

-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추악한 본성이 아니라 인류의 경제·문화 발전,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임.
  - 인류는 교환·거래를 위한 생산 및 분업의 확대를 통해 경제·과학기술·문화·제도의 발전을 이루어 왔음.
  - 이러한 교환과 특화는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동기를 통해 이루어짐.
  - 합리적 개인이 교환과 특화를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치·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 외부의 강압이나 폭력, 개입이 배제된 개인의 정치·경제적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그 사회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교환·분업 및 특화를 생산의 획기적인 증대와 경제의 급속한 성장, 기술발전 및 후생 증대로 이어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
  -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시스템
  - 이런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시장에서의 거래를 매개로 한 자발적 협조를 통해 경제발전과 후생증대를 촉발시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을 줌. 따라서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적임.
  -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정치·경제적 자유가 보장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이 국가 혹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가 개인을 위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
  - 개인보다 국가·사회 이익이 우선시되는 것은 개인의 정치·경제적 자유가 국가·사회 이익의 명목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
  -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제한된다면 이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제약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제적 자유의 제약은 시장에서의 거래를 위축시킴으로써 개인들의 자발적 협조에 의한 사회적 분업 및 전문화도 제약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사회 발전의 정체를 가져옴.
  - 따라서 개인의 이익 추구를 제한하는 국가의 제도 혹은 조치는 경

제·사회 발전과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도덕함.

- 자유 시장 경제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는 신뢰와 도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sup>34)</sup>
  - 시장에서의 거래는 신뢰를 전제로 함. 상호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수많은 개인들 간의 대규모 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
  - 이와 같은 신뢰가 담보되는 것은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해 가능해짐.
  - 공공의 이익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된 경제에서는 시장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제한되며, 이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다른 지대추구적 행위가 증대하여 시장에서는 경쟁 압력이 감소됨.
  - 경쟁 압력의 감소는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유인이 감소됨을 의미하며 이는 전반적인 신뢰와 도덕성을 제고해주는 자율적인 메커니즘이 약화됨을 의미함.
  -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쟁 압력으로 인해 시장에서 도태되므로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신뢰와 도덕성을 제고시킬 유인이 존재함.

## 7.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하준의 인식 (*Thing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나쁘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는 주장
  - 장하준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정치적 재난의 원인 혹은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언급
  -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모두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
  - 또한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나쁘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며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오히려 성장을 둔화시키는 등 경제에

---

34) Adam Smith(1795),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참조

해롭다고 주장

- 인플레이션 억제는 경제적 안정이 아닌 불안정을 촉발시키며 금융 자산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
  - 물가 안정은 경제 안정도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에 불과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적 거시경제 정책 추진 이후 오히려 금융위기의 빈발, 고용 불안정 증대로 경제의 불안정이 확대됨.
  - 금융자산은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수익이 감소하므로 금융자산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입안된 것이라고 주장

□ 장하준은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금융위기 등의 부정적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 억제책과 연결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monetary phenomenon)으로 통화 공급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음.
  -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증대에 비해 통화량이 더 크고 빠르게 증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함.
  - 1969~1979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평균 7%이고 통화량 증가율은 평균 9%임. 통화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는 같은 기간 미국경제의 평균 성장률 2.8%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통화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즉 과도한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은 지난 100년간의 선진국의 예뿐만 아니라 최근 수십 년간의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도 경험적으로 증명된 사실<sup>35)</sup>
- 과도한 통화량 증가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지출의 증가에 있음.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등 대부분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전쟁, 혁명 등의 이유로 통화량의 발행이 급증했기 때문임.

---

35) 1980년부터 2001년까지 108개국의 평균 인플레이션과 평균 통화 증가를 나타낸 Romer, D.(2006). Advanced Macroeconomics, McGraw-Hill/Irwin, 3rd edition의 Figure.10.1을 보면 통화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빈번히 나타났고, 그 원인은 이전처럼 전쟁, 혁명 외에도 기타 대규모 정부지출의 충당을 위한 화폐 발행의 증가에 있음.
  - 정부지출의 증대는 조세수입에 의해 충당되어야 하나 증세는 조세저항의 가능성 등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어 화폐 발행의 증대를 통해 충당되는 경우가 많음.
  - 인플레이션이 모두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은 아니나 주기적으로 지속되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투자·소비·고용·성장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주기적으로 지속되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
-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화폐보유를 감소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구두창 비용’(shoe leather costs)과 가격조정 비용인 ‘메뉴 비용’(menu costs)을 들 수 있음.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비용은 조세체계의 왜곡임. 즉, 세율은 명목 소득에 부과되므로 인플레이션은 자본이득, 임금 등에 대한 실질 세율(effective)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저축·투자·노동 유인을 감소시키고 왜곡시킴.
  - 따라서 주기적으로 지속되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조세체계를 왜곡시켜 효율성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축 및 투자의 감소를 통해 생산 및 성장의 둔화를 가져오게 됨.
  - 화폐발행의 증대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정부는 조세수입 외에 또 다른 수입원을 갖게 되어 정부지출의 증대가 가능해짐.
  -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정부지출 증대가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음. 장하준의 주장은 이러한 논의에 일부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그러나 정부지출 증대의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오히려 민간의 투자를 구축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논의는 근거가 약함.

- 인플레이션이 투자와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경험적 증거
  - 장하준은 인플레이션 억제책이 투자와 성장을 오히려 위축시켰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성공한 1990년대부터 2009년까지의 선진국의 연평균 1인당 소득증가율이 더 낮아졌음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 비해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였던 시기가 투자, 소비, 성장, 고용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는 경험적 증거는 무수히 많음.<sup>36)</sup>
  - Fischer, Sahay, Vegh(2002)는 전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를 포함한 25개국의 자료를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투자, 소비, 성장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줌<sup>37)</sup>.
  - 미국의 경우도 다양한 자료와 지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음. 예를 들면, 1950년대 이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시기와 낮았던 시기를 나누어 경제성장률을 살펴본 결과 낮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더 높은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다음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953~1990년까지의 시기에 연대별로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와 낮은 인플레이션 시기의 평균 고용증가율을 살펴본 결과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용증가에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

36) 대표적으로 Fischer, S.(1993), "The Role of Macroeconomic Factors in Grow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2, pp.485~512와 Bruno, M. and W. Easterly(1998), "Inflation Crise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41, p.3~26이 있음.

37) Fischer, S., R. Sahay, and Vegh, C. A.(2002), "Modern Hyper- and High Infl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3), p.837~880.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고용증가율		
		당해년도	다음해	누적
<b>1950년대(1953-62)</b>				
고물가(상위 4개년도)	2.3%	0.8%	0.3%	1.1%
저물가(하위 4개년도)	0.5	1.4	2.4	3.8
<b>1960년대(1962-71)</b>				
고물가(상위 4개년도)	4.9%	1.6%	2.0%	3.6%
저물가(하위 4개년도)	1.8	2.2	2.4	4.6
<b>1970년대(1971-80)</b>				
고물가(상위 4개년도)	11.3%	1.1%	1.0%	2.1%
저물가(하위 4개년도)	5.4	3.5	3.4	6.9
<b>1980년대(1980-89)</b>				
고물가(상위 4개년도)	6.4%	1.6%	0.7%	2.3%
저물가(하위 4개년도)	3.1	2.1	2.8	4.9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 8. 무역 및 투자

□ 자유무역 정책이 성공한 적이 없다는 장하준의 인식 (Thing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 미국을 비롯한 현재의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된 것은 보호무역 덕분이라는 견해
  - 장하준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19세기의 유력한 대통령들이 모두 보호무역을 주창하였음을 언급
  - 미국 연방정부 시스템을 설계한 해밀턴과 제퍼슨을 언급하면서 해밀턴은 유치산업 보호를 주장하였고 제퍼슨은 보호무역에는 반대하였으나 특허제도에도 반대하였음을 지적
  - 벤저민 프랭클린과 링컨, 잭슨 대통령도 모두 보호무역을 주장하거나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였음을 지적
  - 영국의 경우도 18세기 중반 로우컨트리(네덜란드·벨기에)가 주도하던 당시의 하이테크 산업인 모직산업에 진출하여 관세 및 보조금 등 정부지원으로 성장하여 수출을 통해 산업혁명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식량을 확보하였다는 주장

- 선진국들은 네덜란드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호 무역을 통해 성장하였다고 주장
- 개발도상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치산업 보호와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장하준의 주장
- 개발도상국들은 신자유주의 처방에 충실했던 시기보다 보호무역과 정부개입 정책을 채택했던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다고 주장
  - 개발도상국들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능력을 갖추기 때까지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하며, 둘째, 경제발전 초기에는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므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국영기업을 통해 많은 일을 직접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장하준의 보호무역 및 정부 개입 주장과 그 근거는 논리의 부재, 인식의 오류, 그리고 사실에 대한 왜곡을 극명하게 보여줌.

— 유치산업 보호론에 대하여

- 장하준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유치산업 보호론은 이론적·경험적으로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이론<sup>38)</sup>
- 유치산업 보호론의 핵심은 장하준의 주장과 같이 보호를 통해 기술 발전을 할 시간을 벌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
- 그러나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는 비효율적인 생산자의 시장진입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낮은 품질의 제품 생산이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효과

---

38) Baldwin, R.(1969), "The Case against infant-industry tariff prote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7(3), pp.295~305. Krueger, A. O.(1997), "Trade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How we learn," *American Economic Review*, 87(1), pp.1~22. Grossman, G.M., Horn, H.(1988), "Infant-industry Protection Reconsidered: the case of informational barriers to ent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3(4), pp.767~787. Leahy, D. and P. Neary(1999), "Learning by doing, precommitment, and infant-industry protec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66(2), pp.447~474. Saure, P.(2007), "Revisiting the infant industry argu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4, pp.104-117.

가 없음.

- 유치산업 보호론에 따른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채택한 산업화 전략이나 이것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주지의 사실임.
  -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수입대체공업화 대신 수출주도공업화 전략을 채택한 국가들은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 대신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서 수출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급속한 산업화 및 경제성장을 이룩함<sup>39)</sup>.
  - 장하준의 주장과는 달리 1980년대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을 버리고 한국 등 신흥공업국들이 채택했던 수출주도공업화 전략으로 전환하여 세계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산업화 및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성공함.
-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으로 성공했다는 견해에 대하여 1 (19세기 미국)
- 알렉산더 해밀턴이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미국의 경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시스템의 수립에 공헌한 것과 그가 작성한 "Report on Manufactures"(1791)가 유치산업 보호론을 최초로 정립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의 보고서가 실제로 채택된 적도 심각하게 고려된 일도 없음.
  - 오히려 해밀턴은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생 독립국가인 미국, 특히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을 위해 관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영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최소화하면서 관세수입을 올리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관세부과를 주장하였음<sup>40)</sup>. 따라서 해밀턴 전략의 핵심이 보호주의였다는 해석은 사실이 아님.
  - 미국은 18세기 후반 독립 이후 19세기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20세기 초반에는 세계 최대의 산업국이 되었음.
  - 미국이 19세기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발명 등 혁신의 유인을 촉진시키고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만든 제도와 시스템에 있음.
  - 미국의 연방정부 시스템은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통해 견제와 균형, 그리고 정부간의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비효율적인 규제 및 시

39) Baldwin, R.(2003), Openness and Growth: What's the empirical relationship?, NBER Working Paper 9578 참조

40) Irwin, D. A.(2009), Revenue or Reciprocity? Founding Feuds over Early U.S. Trade Policy, NBER Working Paper 15144 참조



장개입이 차단되었고, 이로 인해 지대추구행위의 유인도 낮았음. 또한 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 시스템은 사업에서 장기 계약 및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들어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성장에 기여했음.

- 토지는 국토가 확장되면서 정부의 토지 매입 이후 사유화 (privatization)를 통해 토지매매를 용이하게 하였고, 노동력은 비공식적이기는 했으나 자유이민 정책을 통해 상대적 희소성을 극복하였으며, 자본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유럽으로부터의 대규모 자본 유입이 이루어짐.
  - 19세기 관세는 여타 서구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산업에 대한 보호보다는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음.
  - 미국에서 보호주의적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것은 남북전쟁 이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기간인데 이 기간은 미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시기이기도 함.
  - 그러나 섬유산업, 철강산업 등의 급속한 성장은 국내시장의 확대에 따른 국내수요의 급증과 면화, 철광석 등 풍부한 원료로 미국이 그 산업에 잠재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었다는 데에 기인하였고 관세에 의한 수입품과의 경쟁제한의 영향은 미미하였음.<sup>41)</sup>
  - 또한 고율 관세에 의한 산업 보호가 미국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는 경험적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sup>42)</sup>
  - 따라서 미국이 유치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통해 성장하여 선진국이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으로 성공했다는 견해에 대하여 2 (18세기 영국)
- 장하준은 최초의 대영제국 수상 로버트 월폴과 그의 계승자들이 모직 제조업자들에게 관세,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하여 모직공업이 성장하였고, 모직물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산업혁명에 필요한 식량과 원자재를 마련하였다고 주장

41) Lipsey, R. E.(2000), "U.S. Trade and Balance of Payments, 1800-1913," in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Vol. II, edited by Stanley L. Engerman and Robert E. Gallman.

42) Head, K.(1994), "Infant industry protection in the steel rail industr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7, pp.141-165. Irwin, D. A.(2000), "Did Late-Nineteenth-Century U.S. Tariffs Promote Infant Industries? Evidence from the Tinplate Indust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0(2), pp.353-360.

- 장하준의 주장은 당시 유치산업인 모직공업에 대한 보호가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로버트 월폴이 모직공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유치산업 보호가 아닌 사양산업 보호정책이었음.
- 영국의 모직공업은 18세기가 아닌 17세기에 절정에 달했고 17세기 후반부터 인도 등으로부터의 면직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모직물 제조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의회가 면직물의 수입뿐만 아니라 착용, 사용까지 금지하는 캘리코법(Calico Act)을 1722년 제정함.
- 캘리코법에 이어 모직물 제조업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들이 18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나 모직공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함.
- 모직공업을 보호하기 위한 캘리코법<sup>43)</sup>을 우회하여 면직물이 아닌 면직물의 원료인 면화가 수입되었고 수입된 면화로 기존 영국의 선대제도(putting-out system)<sup>44)</sup>을 이용하여 면직물의 생산이 증대하였음.
- 면직물에 대한 국내 및 수출수요가 급증한 반면 기존의 생산방식으로는 공급 증대가 어려웠으나 혁신 유인에 따라 개발된 각종 직조기 및 방적기(flying shuttle, spinning jenny, water frame)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제고되어 면직공업이 영국에서 급성장하게 됨.
- 면직공업에서의 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공업발전은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됨.
-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배경은 먼저 영국의 기업가들이 유럽 등 여타 국가들의 기업가에 비해 투자, 혁신, 생산과 이윤 추구가 자유로웠다는 점과 봉건적 신분관계에 매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노동력이 풍부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시장에의 접근이 용이했다는 점에 있음.
- 따라서 유치산업인 모직공업의 보호를 통해 영국이 산업혁명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식의 주장은 근거 없음.

□ 초국적 기업의 활동 및 선택에 대한 장하준의 인식 (Thing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43) 캘리코법은 1774년 폐지되었음.

44) 영국의 모직공업이 로우컨트리를 추월한 원인도 로우컨트리에서는 강력한 수공업 길드가 보다 효율적인 선대제도에 의한 생산을 제약한 데에 있음.

- 기업의 자국 편향은 도덕적 동기나 역사적 책임감과 더불어 경제적 인 이유가 있다는 주장
  - 장하준은 초국적 기업이라도 기업의 핵심적인 연구개발, 전략 설정 등 중요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지고 최고 경영진도 본국 국적 사람들로 채우는 등 자국 편향을 보임을 지적
  - 자국 편향은 경영진의 도덕적 동기와 자신의 국가에 대한 역사적 의무에 일부 기인한다는 주장
  - 기업은 발달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므로 이러한 역사적 채무관계로 인해 국가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임.
  - 초국적 기업들이 자국 편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적·조직적 자원,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의 타국 이전 어려움에 따른 경제적 이유라는 주장
  
-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일 때 자국 편향 및 자본의 의도와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 개발도상국에서는 최소한 일부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바람직함.
  - 더 나은 방안은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일 때 국내 기업의 역량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

□ 다국적 기업들이 행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투자 및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술 및 지식의 확산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장하준이 이야기 하는 기업의 자국 편향에 대하여
  - 소위 다국적 기업들(multinationals)이 연구개발 기능이나 기업의 핵심 기능을 본국에서 행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제도와 인적 자본 및 지적 자본의 수준 등이 그 기능에 적합하기 때문임.
  -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현상은 다국적 기업들이 R&D 등 기술개발 기능을 세계 여러 국가로 분산하면서 나타나는 R&D의 국제화임.
  - 기업의 전체 R&D에서 해외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1982년 6.4%에서 2004년에는 16.3%로 증가했고,

스웨덴의 경우는 이 비중이 1994년에 이미 24.7%에 달했으며, 영국의 경우도 1990년대에 이미 해외 R&D가 급증하여 제약산업에서 해외 R&D 비중이 1999년에 55%에 달하게 됨<sup>45)</sup>.

- 다국적 기업들은 R&D 국제화와 더불어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투자 및 생산을 통해 지식 및 기술을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
  - 물론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의 시장 규모, R&D에 적합한 제도 및 인적자원 등이 R&D 센터 유치 및 그 국가에서의 다국적 기업들의 R&D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
  - 따라서 R&D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에 자국의 여건이 적합하면 자국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해외의 여건이 더 유리하면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임.
  - 장하준이 이야기하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기업의 자국 편향은 연구 개발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에 자국의 여건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 장하준의 외국인 투자 선별 유치 주장에 대하여
- 다국적 기업의 자국 편향은 국가별 비교우위, 인적·지적 자본의 조건, 제도 등에 좌우되며 R&D 국제화 등에서 보듯이 기업에 내재하는 절대불변의 특성이 아님.
  - 또한 자국 편향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국가 경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산업보다는 그렇지 못한 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함.
  - 장하준의 주장은 국가 경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이 있다는 것이고 정책입안자는 도움이 되는 산업에서 국내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유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한 국가 경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산업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고<sup>46)</sup> 설사 그러한 산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

45) Athukorala, P. and A. Kohpaiboon(2010), "Globalization of R&D by US based multinational enterprises," *Research Policy*, 39, p.1335~1347. Gerybadze, A. and G. Reger(1999), "Globalization of R&D: recent changes in the management of innovation in transnational corporations," *Research Policy*, 28, pp.251~274.

46) 장하준은 그런 산업이 존재하고 또 그 산업에서 보호와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을 육성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국가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됨.

제도, 부존자원, 인프라, 인적 자본 및 기술 수준이 그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외국인 투자는 커녕 보호와 지원을 쏟아 부어도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의 육성도 어려움.

- 장하준의 주장대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소위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산업에서의 국내 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 유치 보다는 국내외 구분 없이 정부정책으로 이득을 보려는 지대추구행위가 만연해질 가능성이 높음.
- 장하준의 주장과는 달리 다국적 기업 등에 의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증가는 투자 및 고용의 증대 효과 이외에도 제품 및 생산과정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지식 및 기술의 확산 효과<sup>47)</sup>가 있고, 이를 통해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
-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 편향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이러한 자국 편향은 절대불변의 특성이 아니라 각국의 기업환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
- 이런 현상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의 제한 및 선별 유치를 정책적으로 시행한다면 결과적으로 투자 및 고용 증대, 그리고 지식 및 기술 확산과 그에 따른 전반적인 기술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득을 향유하지 못하게 될 것임.

## 9. 탈산업화

□ 탈산업화에 대한 장하준의 인식 (*Thing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탈산업화 현상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수지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
  - 장하준은 탈산업화, 즉 제조업 비중의 감소가 제조업 제품에 대한

47) Blomstrom, M. and A. Kokko(1998),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spillover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2, p.247-277. Markusen, J. R.(1999),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a catalyst for industrial develop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43, pp.341-356.

수요가 상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조업 부문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에 따라 제조업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 따라서 고용의 관점이 아닌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
  - 탈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성 증가가 경쟁국보다 떨어지거나 혹은 탈산업화에 따른 제조업 비중 하락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가 제약되면 국제수지 적자가 심화되어 생활수준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
- 개발도상국이 산업화 단계를 건너뛰고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견해
- 서비스 부문은 본질적으로 제조업 부문보다 생산성 증가 속도가 느리다고 주장
  - 서비스 상품의 교역 가능성이 낮아 서비스에 특화된 나라는 국제수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해외 선진기술 수입 능력을 떨어뜨리므로 서비스 산업 기반 발전 전략은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이라는 주장

#### □ 장하준의 탈산업화 인식 및 관련 정책 제언에 대한 평가

- 탈산업화의 원인에 대한 평가
- “보몰의 병리(Baumol’s cost disease)”: 생산성 향상 없이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 일부 서비스 부문, 예를 들면 공연 예술(performing arts) 분야에서와 같이 노동생산성은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경쟁으로 인해 종사자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나타남<sup>48)</sup>.
  - 서비스 부문은 생산성 증가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상대가격이 높아진다는 장하준의 견해는 거의 모든 서비스 부문에서 “보몰의 병리” 현상이 나타남을 전제로 함.
  - 그러나 거의 모든 서비스 부문에서 “보몰의 병리”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부문 상대가격이 높아져 서비스 비중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통해 서비스 부문에 대한

48) Heilbrun J.(2003), "Baumol's cost disease," A Handbook of Cultural Economics.

전반적인 수요 증대가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장하준이 소위 '탈산업화'라고 부르는 현상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분화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거래 증가 및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여 나타나는 현상
  - “보몰의 병리” 현상과 같은 노동집약적 부문에서의 생산성 정체가 모든 서비스 부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부문에서도 IT 기술 및 과학적 경영기법의 발달 등으로 괄목할만한 생산성 증대가 나타나고 있어<sup>49)</sup>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을 이분법으로 나눠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높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
- 탈산업화는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특히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 장하준은 제조업 생산성의 정체 혹은 제조업 비중의 감소(탈산업화)는 국제수지 적자를 결과하고 이는 생활수준의 저하, 개도국의 경우 경제성장 능력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희박한 논리
  - 장하준은 국제수지가 적자 상태에 빠져 이를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돈을 빌리면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수입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생활수준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
  - 국제수지 적자<sup>50)</sup>로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반면 수출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져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변화는 국제수지를 적자에서 균형 혹은 흑자로 전환시킴. 이 경우 자국의 통화가치는 다시 상승함.
  -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생산성이 빠르게 증대하는 경우에도 국제수지 적자는 나타날 수 있음. 예를 들면 수출주도공업화를 통해 급속하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로 한국이 1980년대 초반까지 경험했던 것처럼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제조업 생산성 정체 혹은 탈산업화로 인해 국제수지가 적자

49) 미국의 경우 1995년 이후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는 추정 결과를 Triplett, J. E. and B. P. Bosworth(2003), "Productivity Measurement Issues in Service Industries: "Baumol's Disease" has been cured," FRBNY Economic Policy Review, September 2003, pp.23~33에서 볼 수 있음.

50) 장하준은 경상수지 적자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상태에 빠지게 되면 생활수준의 저하로 이어지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이라는 주장은 일반화시키기 어려움.

- 장하준의 탈산업화 논의는 정부 주도로 보호와 지원을 통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만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
  - 역사적으로 제조업 중심이 아닌 농업이나 서비스 부문의 비교우위 혹은 생산성의 상대적 우위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했거나 하고 있는 예는 19세기부터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을 들 수 있고 최근의 인도도 지식기반 서비스에서의 비교우위를 통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기술 혁신에 힘입어 생산에 필요한 여러 과업(tasks)의 공급망이 국제적으로 형성되어 과업 자체가 교역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는 해체된 과업의 교역가능성, 외주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음.
  -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즉 대해체(great unbundling)의 특징은 오프쇼어링이 가능한 과업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
  - 따라서 개인,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과업 및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응한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유 시장, 자유 무역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 10. 아프리카

□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에 대한 장하준의 인식 (*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 아프리카의 구조적 문제가 저개발의 진짜 요인은 아니라는 견해
  - 장하준은 아프리카의 구조적 문제가 더 심했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주장
  - 아프리카 정체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구조적 요인들 중 대부분은 오늘날 부자 국가들도 가지고 있던 문제라고 주장
  - 구조적 문제가 발전의 장애 요인처럼 보이는 것은 이런 요인들이 발생시키는 문제를 처리할 만한 기술적, 제도적, 조직적 기술을 확



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 지난 30년동안 아프리카의 정체를 불러온 진짜 요인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강요된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이라는 견해
  - 1960~70년대 사하라 이남 지역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은 1.6%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 이는 이 지역이 겪고 있는 최근의 정체가 구조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주장
  - 1970년대 말부터 사하라 이남 국가들에서 실시한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의 조건으로 따라 온 자유시장, 자유무역 정책 추진이 제조업 기반의 붕괴, 국제가격 변동이 심한 1차 상품에의 의존 강화, 취약한 사회간접자본 등의 결과를 가져와 아프리카를 정체 혹은 후퇴로 몰아넣었다고 주장

□ 아프리카의 성장 정체의 원인은 전쟁 등 정치적 혼란, 질병, 인구의 급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에 부적합한 제도(institutions)에 있음.

- 아프리카의 구조적 문제가 저개발의 진짜 요인이 아니라는 견해에 대하여
  - 아프리카의 기후, 지리적 조건, 자원 조건 등은 저개발의 부차적 요인
  -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무역에 있어서 불리한 지리적 조건을 지닌 것은 사실이고 또한 에이즈와 열대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대규모 확산이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임.
  - 장하준은 이와 같은 요인들에 대해 이전의 선진국들도 유사한 조건에 있었고 극복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했으나 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해서 아프리카의 저개발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음.
  - 자원의 저주도 단순히 아프리카의 자원이 풍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풍부한 광물자원이 제도적인 문제점과 결합되어 부패의 확산 및 독재자의 권력 강화, 그리고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을 촉진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해야 함.
  - 아프리카 국가들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아프리카는 1980~2008년 사이 연간 평균 인구증가율이 아시아 1.37%, 라틴아메리카 1.51%보다 월등히 높은 2.4%에 달함.

- 다만 이와 같은 요인들이 아프리카 경제의 정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음.
- 민족간 갈등을 비롯한 정치적 문제와 제도적 요인은 아프리카의 성장을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이며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찰이 필요함.
-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70년대에 독립국가가 된 이후 냉전의 영향, 군사독재, 민족간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부정부패가 지속되었음.
- 식민지 시절에 노예무역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아프리카의 제도적 기반은 기본적으로 재산권 보호에 매우 취약하였는데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의 만연, 그리고 독립 이후 맑스-레닌주의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 불안정한 재산권이라는 제도적 특징은 더욱 심화됨.
- 불안정한 재산권이라는 제도적 특징은 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한하여 경제성장에 매우 부정적임은 역사적·경험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 아프리카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저축이 취약한 재산권으로 인해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음.
- 물론 장하준의 지적과 같이 제도적 문제점은 발전을 제약할 수 있음과 동시에 경제발전의 결과가 제도의 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성장과 부국으로 이르는 길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필요조건은 아님.
- 많은 사하라 이남 지역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부패와 관료주의, 그리고 제도의 미비로 인한 열악한 기업환경
-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환경지수(Doingbusiness Index)로 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업 환경은 전 세계 183개국 중 모리셔스<sup>51)</sup>(20위), 보츠와나(57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위 이하로 매우 열악함.
- 이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고, 소규모 공동체를 벗어난 거래, 교역, 기업 활동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의 미비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대내외적 교역 및 기업 활동의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이 크게 제약됨.
- 결론적으로 취약한 재산권 및 부패와 관료주의를 확대시키고 열악한 기업환경을 낳는 아프리카의 제도가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

51) 모리셔스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원인은 Frankel, J. A.(2010), "Mauritius: African Success Story," NBER Working Paper 16569를 참조. 성장-수출 친화적 정책과 안정적인 재산권 등이 성공 원인으로 제시됨.

남 국가들의 경제 정체의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보츠와나: 지리적으로 교역에 불리한 내륙에 위치한 점,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등 사하라 이남 국가들과 유사한 요인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institutions)를 기반으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수출 및 투자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난 40년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sup>52)</sup>
-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정체를 가져온 진짜 요인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강요된 자유 시장 경제 정책 때문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 독립된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가 대부분 1차 상품의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면서도 수입대체공업화를 통한 산업화를 추진
  - 이를 위해 농업에 대한 차별,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지원 및 특혜가 당시 아프리카 국가 경제정책의 특징
  - 이러한 정책은 농산물 등에 대한 가격통제(상한 설정), 농산물 판매 및 수출의 정부 개입(marketing boards) 등 농업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으로부터 재원을 추출하였고 이는 소수 집권세력을 위한 수입 증대의 역할을 함.
  - 수입대체공업화를 통해 산업화를 이룬다는 명목으로 경쟁력 없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는 집권세력을 포함한 소수 도시엘리트에 대한 특혜로 비효율적인 정부지출과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짐.
  - 1970년대 초반까지 1차 상품의 국제가격 상승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수입 및 정부수입 증대로 이어졌고 이는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이어졌음.
  - 그러나 1970년대 중후반부터 나타난 선진국의 경기 침체와 교역조건 악화 등의 요인으로 수출수입 및 정부수입의 감소 등이 나타났고, 이에 따른 경상수지의 대규모 적자와 외화 부족에 따른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역 및 환율 통제와 더불어 대외채무 및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감.

---

52) IMF에 따르면 보츠와나는 독립한 1966년부터 1999년까지 연평균 9%의 GDP 성장률을 보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2010년 현재 1인당 GDP가 \$14,800에 달함. 정부의 재정정책의 건전성, 낮은 대외부채 수준, 경쟁적이고 상대적으로 발전된 금융기관의 존재 등은 안정적인 재산권이 보장되는 보츠와나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가능함. Acemoglu, D., S. Johnson and J. A. Robinson(2001), "An African Success Story, Botswana", mimeo 참조.

-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외화 부족에 따른 재정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세계은행과 IMF 등으로부터의 저리 융자와 원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이 제시되었던 것<sup>53)</sup>
-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취약한 재산권, 관료주의 및 부패를 가져오는 제도가 온존한 가운데 그리고 국가별 거시경제적 안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 및 원조를 위해 제시되었고 또한 기존 정책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도시 엘리트 등의 정치적 반발로 개혁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했음<sup>54)</sup>.
- 장하준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시작된 1980년대 이전과 이후의 성장률을 비교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국제기구로부터 지원 및 원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지원 및 원조를 받은 이후 성장 및 생활수준의 정체 혹은 퇴보를 보인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 및 원조의 효과가 없었음을 증명<sup>55)</sup>.
- 또한 조건부 지원 및 원조가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서 의도했던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것은 최근의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경험적으로 증명됨.<sup>56)</sup>
- 따라서 세계은행과 IMF가 행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조건부 원조와 지원은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실패하였고 경제 성장의 촉진에도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실을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조건이 민영화, 무역자유화, 균형재정 등이었다는 이유로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의 강요가 지난

5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 SAPs를 조건으로 지원 및 원조를 받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Bautista, R. M. and A. Valdes(1993), *The Bias Against Agriculture: Trade and Macroeconomic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참조

54) Rich, K. M., A. Winter-Nelson, and G. C. Nelson(1997), "Political Feasibility of Structural Adjustment in Africa: An Application of SAM Mixed Multipliers," *World Development*, 25(12), p.2105~2114.

55) Rajan, R. G. and A. Subramanian(2005), "Aid and Growth: What does the Cross-country evidence really show?" NBER Working Paper 11513.

56) 특히 농업에 대한 차별 정책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별로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Thiele, R.(2002), "The Bias against Agriculture in Sub-Saharan Africa: Has It Survived 20 years of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Kiel Working Paper No. 1102의 연구 결과.

30년 동안 아프리카 경제의 정체를 가져온 진짜 요인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음.

## 11. 교육과 경제

□ 교육 및 지식의 경제에서의 역할에 대한 장하준의 인식 (Thing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교육이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
  - 장하준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예(타이완과 필리핀의 비교),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예, 그리고 란트 프릿쳇 교수의 논문을 통해 교육이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
  - 교육은 생산성 향상이 목표가 아니며 현장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교육은 큰 관계가 없으며 그 증거로 수학 성적과 경제 실적이 관련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
- 지식과 고등교육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집착은 학력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견해
  - 지식 경제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지식의 양이 많아졌다고 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계가 더 많은 지식을 대체하므로 기술적으로 발달한 경제일수록 교육받은 사람을 덜 필요로 한다는 주장
  -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학진학률 10~15%로도 세계 최고의 국민 생산성을 기록한 스위스의 예가 이를 보여준다고 주장
  - 생산성 향상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면 교육에 대한 집착보다는 생산적인 기업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 즉 유치산업 보호 육성, 인내하는 자본(patient capital)을 제공하는 금융시스템, 새로운 기회를 주는 복지제도, 연구개발과 훈련을 위한 보조금 및 규제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 장하준의 견해는 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서 인적자본과 지식 및 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왜곡하고 있음.

- 교육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 문맹률이 높았던 나라들이 오히려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한 사실은 시초의 교육수준이 경제 성장과 무관하다는 증거로 제시될 수는 있으나 교육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 장하준이 예로 든 타이완과 한국이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수출주도공업화를 통해 세계시장에 참여하였고 경제발전의 단계마다 그 단계에 적합한 인적자본과 기술의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덕분임.
  - 따라서 경제 성장에 기여한 인적자본과 기술의 축적 및 공급에 있어서 교육의 기여가 컸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
  - 프리젱의 논문(Where has all the education gone?)<sup>57)</sup>을 교육이 성장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세계 각국의 자료를 종합하여 실증분석을 하는 경우 교육수준에 대한 측정오차의 문제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함.
  - 교육과 성장의 관계에 대해 Krueger and Lindahl(2001)은 프리젱의 논문을 포함한 기존의 문헌 검토와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수준에 대한 측정오차가 고려되는 경우 교육의 증가는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임.<sup>58)</sup>
  - Barro and Lee(2010)는 1950년부터 2010년까지 146개국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이 성장에 매우 의미 있는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임.<sup>59)</sup>
  - 교육의 확대 및 수준 상승에 따른 인적자본의 축적은 높은 노동생산성으로 이어지고, 또한 교육, 특히 고등교육을 통해 형성된 숙련 노동력의 증대는 선진 기술 습득 능력을 높여 경제 발전은 물론 유아사망 및 출산률 감소 등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함은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음.

57) 장하준의 책에는 2004년에 발표한 논문이라고 되어 있으나 2001년도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5, No.3(pp.367-391)에 수록된 논문임.

58) Krueger, A. B. and M. Lindahl(2001), "Education for Growth: Why and For Who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4), pp.1101~1136.

59) Barro, R. J. and J.-W. Lee(2010), "A New Data 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World, 1950-2010," NBER Working Paper 15902.

- 지식과 고등교육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고등교육에의 집착은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 지식 경제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앞선 지식을 보유한 국가가 항상 부강한 나라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한 점에서는 수긍할 수 있으나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술진보 및 혁신, 그리고 인적자본이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교육과 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계가 지식과 기술을 대체하게 되어 교육받은 사람을 덜 필요로 한다는 주장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노동과정론을 차용하여 기계화를 통한 비숙련화를 교육 필요성의 감소와 연결시키고 있음.
  - 장하준의 주장은 그가 언급한 바와 같이 Braverman의 논의에 근거하는데 Braverman은 그의 저서 <노동과 독점자본>(Labor and Monopoly Capital)에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그에 따른 기계화는 일자리를 파괴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탈숙련화를 촉진한다고 주장
  - 장하준은 이 논의, 즉 기계화에 이은 노동자의 탈숙련화라는 논의에 근거하여 기술적으로 발달한 경제일수록 교육받은 사람을 덜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Braverman의 논의는 산업혁명 시기의 러다이트 운동의 논리, 즉 기계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논리와 유사하나 기술진보에 의한 기계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임.
  - 기계화 등 기술진보의 결과 보다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자본의 증가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며, 이에 따른 경제의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Braverman은 포드주의의 등장에 따른 assembly line에서 노동자의 탈숙련화를 강조하였으나 기술의 진보는 보다 많은 지식을 지닌 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함.
  -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가 간 소득 격차의 근본적 요인을 기술 및 지식의 격차에서 찾고 있고, 이는 총요소생산성의 차이가 국가 간 격차를 설명해준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Acemoglu and Zilibotti(2001)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소득 격차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산성의 격차를 들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생산성의 격차가 기술과 지식의 이전이 자유로운 경우에도 나

타나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 근로자들의 숙련도 차이에 의해 선진국의 선진 기술이 개도국에서 이용되기 어려운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지적<sup>60)</sup>

- Braverman이나 장하준의 주장과는 달리 기술수준과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숙련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이는 그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특히 고등교육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장하준이 제시한 스위스의 예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하여
- 한 나라의 전반적인 지식이나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대학 진학률을 근거로 고등교육의 경제 발전에서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스위스의 대학 진학률이 다른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직업 교육이 발달되어 있어 고등교육이 대학교육과 고등직업교육으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sup>61)</sup>
  - 스위스가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자와 특허 건수가 세계 1위이며 또한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소위 하이테크 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스위스의 과학기술 수준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양질의 수준 높은 고등교육임.
  - 고등교육과 무관하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 예로 스위스를 들었지만 스위스는 유치산업 보호 등 장하준의 처방과는 달리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 자유<sup>62)</sup>를 통해, 즉 선진국 중 가장 낮

60) Acemoglu, D. and F. Zilibotti(2001), "Productivity Differenc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2), pp.563~606.

61) 스위스에서는 의무교육 9년(초등, 중등교육) 이수 후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 고등학교, 교원양성학교, 그리고 직업학교 등으로 진학함.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도제수업을 통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 후 취업을 함. 진로 수정은 자유롭고 직업학교 졸업 후에도 고급직업교육기관인 응용과학대학에 진학할 수 있음. 장하준이 말하는 대학 진학률은 OECD에서 발표한 고등교육 입학률 중 학업 지향적인 A유형 고등교육 입학률임. 스위스의 A유형 고등교육 입학률이 1995년 17%에서 2000년대에는 40% 부근까지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장하준이 말한 대학 진학률에는 고급직업교육기관인 응용과학대학 등 직업 지향적인 B유형 고등교육 입학률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스위스의 직업 지향적인 B유형 고등교육 입학률은 1995년 29%에서 2000년대에는 20% 미만으로 하락함.

62) 헤리티지 재단과 Wall Street Journal에서 측정한 스위스의 경제자유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4~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은 세율, 규제가 적은 기업환경, 자유무역을 통해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

- 스위스는 식품, 서비스, 정밀기계, 섬유,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정부가 특정산업을 육성, 지원한 예는 없었고 경제력 집중이 높음에도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등 시장개입을 하지 않는 작은 정부의 원칙을 가장 충실히 지키고 있는 국가임.